공동위원장 윤장현·김효석…安신당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카드?

안철수 '새정치추진위' 역할과 전망

4인 모두 시·도지사 후보 거론 지방선거 '올인'

전국 돌며 토론회 … 여론수렴·인재영입 나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가 8일 4인의 공동위원장 선임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정추는 이르면 이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와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민 요구를 수렴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과 함께 정책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창당준비작업을 본격화하게 된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새정추의 전체 규모나 조직구성,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도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추가로 합류할 공동대표단이 있다"면서 "새정치 추진위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인재를 모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인재영입을 추진하면서 새정추의 골격을 잡아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신당 창당 시점에 대해서도 "(창당) 로드맵을 설명할 시간을 갖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안 의원이 이날 발표한 4명의 공동위원장은 김효석 전 국회의원과 윤장현 광주비전21 이사장,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이계안 전 의원 등이다.

이날 회견에서 윤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틀에 대해 고민하고 큰 집을 짓는 데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새로운 변화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 '안풍(安風 : 안철수 바람)'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 "국민이 참여하면 한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과학기술·교육·정부에 참여한 행정경험을 통해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새정치 구현에서 역할을 하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추가 4명의 공동위원장 체제가 됨에 따라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임명된 4인 중 가장 정치경험이 풍부한 위원장은 김 전 의원 뿐이다. 이 전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을 한 번 했을 뿐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김 전 의원이 실질적인 창당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회견 후 "새정추는 인재나 세력을 모으고 정당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등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새정치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또 이번 위원장 인선에 대해 신당 창당보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푼 포석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 전 의원과 윤 이사장은 그동안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고 이 전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 서울시장에 도전한 바 있어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아직 지자체장 후보로 거론된 적은 없지만 인천 출신으로 2004~2008년 인천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인천을 무대로 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인천시장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

"잘해봅시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새정치추진위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계안, 김효석 공동위원장, 안철수 의원, 박호군, 윤장현 공동위원장, 송호창 새정치추진위 소통위원장.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 '새정치추진위' 위원장 프로필

예산·입법대결 '연장전'

與 '박근혜표 공약'·野 '부자감세 철회'에 초점

임시국회 전운 고조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8일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예산안 처리 무산에 더해 법안 통과 건수도 '0'건에 머문 채 100일 회기의 정기국회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1일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예산·입법대결 연장전에 들어가지만 주요 쟁점 현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순항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양측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은 거꾸로 극적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나온다.

여야의 예산 심사 방향 역시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공약' 이행과 서민·취약층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신경 쓰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 감세' 철회는 물론 '대통령 관심 예산'과 '선거 개입 의혹 예산'을 삭감해 복지 사업 확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쓸 계획이다.

여야 양당의 주요 입법 과제는 더욱 판이하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경제 민주화' 및 복지확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의 투자 촉진,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46개 법안을 추렸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이 '규제 해소'에만 방점을 뒀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경제 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8대 법안으로 선정했지만, 새누리당 역시 법안 통과에 협조할 생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김효석 '새정치' 공동위원장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효석 전 의원은 8일 "산당 창당을 준비하고 새정치의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향후 창당 일정에 대해 "아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로드맵은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창당 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전이냐 후이냐 대해서도 아직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책임있게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 참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새로운 정당 건설에 힘을 쏟고 '안풍'(안철수 바람)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야 할 때"리며 "출마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우리는 '안풍'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과 맞딱드리게 되었다"며 "그 근원지는 정쟁과 갈등으로 민생은 뒷전인 낡은 정치를 넘어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표출된 시대정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김 위원장은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에는 수많은 날을 번민으로 보냈다"며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변화와 개혁의 DNA를 차츰 상실해가는 데 아쉬움이 많았다"며 "더 큰 길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파하는 국민에게 손 내밀어 미래 준비"

윤장현 '새정치' 공동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윤장현 광주전남 비전 21 이사장은 8일 "광주·전남 시·도민을 비롯, 국민과 함께 생활정치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운 정치의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정치권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해야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새 정치라고 크게 다를 게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하고, 앞으로 해야할 일은 반드시 하는, 그리고 아파하는 국민에게 손길을 내밀어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가 새정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중책을 맡았지만, 국민과 함께하면서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이라며 "제가 맡은 게 시민사회 영역이어서 전국 지역을 직접 돌며 정책을 듣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진위 내부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고쳐갈 것이고, 폐쇄적인 조직이 아닌 특히 안 의원부터 역동성을 갖고 결기있게 나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조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추진위 역할에 충실하고, 창당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향후 행보 등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한·호주 FTA 동의 못해"

"축산업계 큰 피해 우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축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광주일보 6일자 1면>과 관련 민주당은 6일 "농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이 없는 한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내 자동차 기업이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은 수혜를 입겠지만, 축산농가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전체 수입 쇠고기 중 호주산과 미국산의 점유율은 96%에 달한다. 잇따른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한우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 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급증, 한우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며 "미국산보다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되면 한우 가격의 하락폭도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박근혜 정부는 FTA 시행에 앞서 축산업계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통상협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부조달협정(GPA) 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곤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다른 1명의 공동위원장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